

# 국힘 “국회의원 증원 절대 불가”...정개특위 ‘350명案’ 제동

### 전원위 선거제 개편 논의 앞두고 정개특위 소위 의결안 공개 반대 선거제 개혁 출발부터 험로 예고

국민의힘은 2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절대 없다고 선언했다.

지난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 3가지 안(案) 중 2개 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당 차원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현 21대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여해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의결을 모은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 소위는 지난 17일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국회의원 증원 불가’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누가든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의 근부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 놓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제불명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다”며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정개특위 소위에

서 의결한 3개안에 대해 “전혀 우리 당 뜻과 다른 안건들이 통과됐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는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지만, 의원정수를 늘리는 꿈수는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200인 이상은 적어도 200인에서 299인까지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의원정수조차 헌법 위반이라 판단된다. 하루빨리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5선 중진 조정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행하기’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운(진운석열)계 초선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해 정개특위가 내놓은 3개 안 모두 반대한다. 특히 2개 안은 의원정수를 50명 늘린다는 것인데 나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반대”라며 “여야 간에 ‘의원정수는 늘리지 않겠다’ 등 기준부터 합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의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개안은 ▲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약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승민 “日 마음 여는데 성공? 피해자가 왜 가해자 마음 여나”

### “피해·가해자 전도 어이 없어 대일외교 다시생각하길” 비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와 관련 “다치고 반일”도 안 되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도 안 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세력이라면 중북도, 친일도 아니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일외교에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과 관련해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을 여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브리핑한 것을 두고 “웬만하면 입 닫고 있으려 했는데 한심해서 한마디 한다”며 꼬집었다.

그는 “과거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면 역사는 변할 수 없다.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여야 하나”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 놓았다”며 “이것을 외교적 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이 허구한 날 일본의 사과와 배상에 매달리는 것에 저도 찬성하지 않는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과 상충하는 문제도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가 잘못된 것도 맞는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진실마저 부정하려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부정평가 60%대

### 리얼미터...국힘도 4.5%P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릭을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p) 하락한 36.8%로 집계됐다.

이달 초 40%선 이상이었던 긍정평가는 최근 2주 연속 하락세(42.9%→38.9%→36.8%)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5%p 오른 60.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2주(60.3%) 이후 5주 만이다.

긍정 평가는 20대(3.1%p ↑), 국민의힘 지지층(3.0%p ↑), 학생(2.5%p ↑) 등에서 주로 올랐다.

부정 평가는 인천·경기(4.6%p ↑), 여성(2.3%p ↑), 70대 이상(4.9%p ↑)·60대(4.3%p

↑)·50대(3.5%p ↑) 등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4.5%p 내린 37.0%, 더불어민주당은 3.8%p 오른 46.4%로 조사됐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9.4%p다. 양당은 2월 초부터 매주 단위로 지지율이 엇갈리다 뒤러지며 경합 중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0.2%p 내린 3.7%로 집계됐고, 무당층 비율은 1.2%p 상승한 11.3%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 ‘정치개혁 2050’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은 기득권 지키기”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으로 분할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에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위상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며 “법적인 규제든 정치적 결단이든 위상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 누락”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 지역구 축소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결의안을 두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양당 동반 당선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4, 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기득권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3개 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논의한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이 준비하는 차원에서 불인 이름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태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전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재영 의원 등이 속해 있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